

地方化時代 市郡農村指導所의 役割과 發展方向

김재호* · 김성수**

*통영시 농촌지도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Developmental Roles of Field Agricultural Extension Work in the Localization Process

Jae Ho Kim* and Sung Soo Kim**

*Tongyoung-Gun Rural Guidance Office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oles of field agricultural extension work and it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the localization process. Literature reviews and participatory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to attain the study objectives. Among the identified developmental roles of the field extension work in the localization process were : (1) to build up the agricultural research capability within the locality ; (2) to intensify the fie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 (3)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extension educators.

I. 序 論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94. 12)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대부분의 신분이 1997. 1. 1이후 종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상 이동은 일선 농촌지도소의 경영여건을 크게 변화시킬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화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선 농촌지도소 주변의 몇가지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지도공무원 신분제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1995. 1. 1 현재 농촌지도인력은 6,843명으로 이중 중앙에 근무하는 95명과 도 원 과장급이상 52명을 제외한 6,696명이 1997. 1. 1이후로 지방직으로 신분이 변동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지도직 공무원의 신분의 변동은 일선농촌지도소의 경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앙단위에서 지방단위로 이르는 지시 명령 확인 감독체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중앙정부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예컨대, 직파재배 등)의 추진속도가 늦어질 것이 예상된다.

둘째, 인사임용권이 완전히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으로 귀속되고 지도기관의 장은 현재 보건소장과 같이 아무런 인사권을 갖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지방행정에 아직도 질게 배여있는 행정

직 우선주의의 경향으로 우수인력의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생활지도직의 경우는 시·군 단위에는 생활지도관 정원이 없으므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관례상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때는 1계급 승진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분변화 당시에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상당기간 동안 지도소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Ⅲ. 자치제도의 발전과 일선지도사업의 경영전망

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공공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구체화 시켜주고 주민들이 지방정치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행정 운영의 분권화와 현지화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현대농업은 계절과 공간을 극복하는 농업,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농업, 국경을 초월하는 수출농업, 환경과 생산을 병행시키는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 지역농업개발은 현대농업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과 농민의 경제는 물론 도시의 확장에 따른 자연경관의 유지와 전원도시의 건설, 지역문화의 보전과 인간성의 회복, 민주화에 따른 도시농촌간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농업의 흐름을 보아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농업은 1,2,3차 산업이 결합된 종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네델란드, 스위스등 서구농업은 생산성 향상의 범위를 넘어 전국도의 공원화 또는 국가전체의 정원 관리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바 이들 농업의 세계적 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일선

지도소의 경영전략을 이런 조류의 흐름과 잘 조화되게 편성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농촌지도소 경영의 전망이 꼭 어두운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Ⅳ. 지방화시대 일선지도소의 새로운 역할

지방화의 추세는 지도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지방화된다고 해서 지도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더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험연구기능의 보강이다. 이는 지방화되기전부터 농업기술의 속성상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농업기술이 상당히 국지적(Condition Specificity)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화작목이 시·군간에 차이가 많고 또 경영여건을 구성하는 농업인력, 농민에 축적된 재배기술, 시장여건이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아 중앙이나 도 단위 시험연구 결과를 기다려, 그것을 수동적으로 보급하는 데만 지도기능을 둔다면 지역농업의 발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따라서 기관의 존재가치가 별로 인정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나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특화작목시험장이나 지도소내에 기술개발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이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또 각 지도소가 앞을 다투어 약 2ha 기준의 시험포장을 확보하고 과학영농시설 및 기자재를 확대설치 시키는 지역농업개발센터 개념도 시험연구기능 보강책의 일부이다.

이것은 지방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고 개발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바 이것을 기술보급 기능만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농업의 정보제공기능의 강화이다.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 따라 농업도 정보화의 길을 걷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다. 예컨대, 요즘 농업은 기상을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농업경영의 결과가 큰 차이를 가져오는 바 이를 위한 농업기상정보의 감시와 전파 및 작부체계 및 시장판매에 있어서의 활용, 피해경감예보기능 등이 농산업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도소 내부의 이런 기능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존재가치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농업기상정보체계를 잘 정비함과 동시에 현대농업기술, 농업시책, 가격 및 시장정보 등을 지역사회 농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종합정보망을 형성하고 이용하여 농업경영진단, 농업부기, 선행계획, 토양진단, 작물생육진단, 과수개화기진단 등 농업생산성 증대에 필요한 적절히 가공된 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에 필요한 농가용 전산소프트웨어의 보급과 활용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농간 상보적 기능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역할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도시 쓰레기의 농촌자원화를 유도한다든지 안전한 먹거리와 쉼터의 조성, 학교4H를 통한 청소년의 심성개발, 시민농원운동, 전통음식연구 등이 이 부분에 속한다. 도시 소비자를 농업생산 및 유통체계를 끌어들이어 참여시킴으로서 도·농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지방시대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밀 살리기, 휴가철 고향찾기,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전개 등이 지역에 따라서 권장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영지역이 식물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시민들의 농업적 관심을 크게 늘린 적이 있고 자연학습원의 조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V. 지방화에 따른 몇가지 대책

지방화의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대책으로는 지방지도관의 직위표제정, 도 단위 계장급의 지방지도관 보임,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의 지도기관장 위임, 생활지도직의 승진기회 확대, 현행 단일호봉체제의 개선 등이 검토 될 것이다.

우선 지방지도관의 직위표 제정은 현재 총무처가 관장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내무부 규정에 지방지도관의 직위표를 삽입하는 문제인데 관례상으로 지방직화에 따른 1계급 보상원칙을 세운다면 현 특별시, 광역시, 군, 복합시와 고양시 농촌지도소장은 3급으로 시농촌지도소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담당관과 과장등 모두는 4급으로 직위표에 삽입되고 그 외 시·군 지도소에서 계장 보직을 가진 모든 지도사들이 5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여타부서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조율된 다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 문제는 현행법상 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된 임용권을 도원장 과 시·군 소장에 위임하도록 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생활지도직의 승진기회 확대 문제는 인사권을 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도원 계장급을 지방지도관으로 임용하여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며 현행 단일호봉체제의 개선은 연구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해결방안과 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중에서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단기대책의 성과가 결정 될 것이다.

둘째, 장기대책이다. 아무리 직위표를 제정하고 지방지도관의 임용권을 위임받고, 직급의 격상, 단일호봉체제의 개선이 되어도 이것을 토대로 일선 농촌지도소의 총체적 역량이 지역농업의 발전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또 다른 제도상의 전환을 거듭하게 되어 소모적 과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선 지도소의 총체적 역량을 농업발전적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지도소장을 포함한 지도소 구성직원의 지식적 수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직무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직무교육의 강화는 현재 농촌진흥청의 직무훈련계를 훈련소 내지는 적어도 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같은 직무훈련 수준의 향상이 앞서 말한 단계적 제도개선의 노력과 같이 결합될 때 변화되는 주변 환경속에서 지역사회의 농업발전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I. 몇가지 일선 경험

일선 기관장으로서 필자의 경험은 아직도 매우 짧은 것에 불과하지만 시기적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중에 있어 매일을 분단위 초단위로 나누어야 할만큼 범상치 않은 많은 경험을 하였다. 이것은 아마 여러 선배와 동료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직급은 군수와 같은 급으로 인지하고 현지에 왔으나 간부회의 첫날부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 군에서 자리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제반 직위분류가 총무처 예규에서 적힌 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만약 기관대표가 아니라면 성격상 자리탓 등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관장의 위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동료직원들도 활동하는데 불편하고 일상 업무 추진에도 지장이 많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번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자리배정상의 위치는 확보해서 약 6개월을 지났다. 그러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자 이번에는 더 곤욕스러운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예우를 해주는 듯 하더니만 1주일후에는 또 자리를 바꾸어서 앉으라고 하는 등 지도기관장의 위치 찾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시장을 찾아가서 꽤 오랫동안 법률 등을 따지며 설득을 한 끝에 겨우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쑥스러워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따름이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눈 딱 감고 자리가 무슨 소용있느냐 하고 하려 해도 설명하기 매우 힘든 일선지방 행정의 분위기 때문에 기관장 스스로가 이런 부류의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해야하는 것이 일선지도기관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 다음 기관장은 주어진 일을 잘 해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지도사의 배치는 지역농민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 따라 배치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이미 감지하고 왔기는 하였지만 중앙과 도의 편제에 따라 극히 획일적인 편제로 편성되어 있어서 특화작목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잘 정리·정돈하여 지역 농민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있다기 보다는 아직도 상급부서로부터 내려오는 문서처리와 각 종회의결과와 전달과 집행 등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는 어느 부서나 공통된 문제이겠지만 상급부서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일선기관에 부여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일선 기관장들은 이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필자 또한 그렇다. 필자의 경우에는 아침 간부회의를 없애 버렸다가 과장 두분이 최근 새로 승진되어 전입되어 와서 2~3일간 운영해 왔으나 곧 중단할 계획이다. 그대신 아침 08:30분에 시작하는 일본어 시간을 약 한시간 두어서 운영하여 직원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지사항을 수시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대신에 모든 일들은 8개 전략 작목별로 팀을 만들어 되든 않되든 거기에다 모든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고 기관장이 알고 싶으면 그 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그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으나 작목단위 활동은 많이 촉진되는 듯 싶다. 또 한가지 일선 활동을 관찰해 보면 많은 부분의 사

고가 양과 계수에 매달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도사업은 지도사의 창의성과 노력에 바탕을 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컨대 농민상담실 내방객 숫자나 이용빈도를 참고 삼아 모니터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것이 시·군간 혹은 비교 개념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영상담 성과 평가의 척도는 상담결과 농업인의 자립도 향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모여 컨설팅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숫자를 늘이려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농림 수산 통합 지침이라는게 나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도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잘 포착하여 토양전문가, 경영전문가, 분야별 작목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영농설계에 참가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여겨져서 통영시 지도소에서는 이른바 주문식 경영설계 서어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혜택 본 농업인의 숫자는 크게 제한되어 있으나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의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된 듯하다. 작목별로 농가회 모임을 이용한 지도방법은 전문지도사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흑염소사육협동조합이라든지 유자작목회라든지 작목별 농가모임이 조직되어 지도사업 측면에서도 농업발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농업인의 교육은 가장 큰 지방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관행이 남아 현지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이른바 교안심사 제도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일선실정이 수준높은 교안을 작성할 수 있을만큼 재정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으나 현재로서 교육할 것은 많고 시간과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경험으로는 교안작성 하는 시간보다는 전문지도사들이 농가를 자주 방문하여 “짧은 시간에 무

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안심사는 지도소 단위에서 잇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본다.

청소년 4-H문제는 역시 영농회원이 줄고 학생회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외부의 비판소리를 가끔 들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에도 아침조회시에 가까운 예산을 따서 농촌에 남아있지도 않을 학생들에게 경진대회니, 야영이니 할게 무어나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날 필자는 4-H는 꼭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덕노체의 청소년 정신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겨우 벗어났으나 그것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년의 대회에서는 인터넷 정보사냥등 17개의 경진종목을 개발하여 참석한 학생들과 영농회원들은 만족하였으나 예산당국을 설득시키는 데까지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생활개선문제는 역시 너무 잡다한 과제의 문제인 듯하다. 과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면 A과제 1농가, B과제 2농가, C과제 3농가 등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의회 등 외부의 인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아직 할 일은 많고 직원수는 적은데 기인하고 있을 것이나 방법면에서 볼 때 우리지역의 경우 “농부증”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더 필요할까 생각되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시키려 해도 역시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가 생활개선 분야이다.

일선 “일”의 경험을 요약하면 그래도 뚜렷한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팀은 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작목지도의 경우에는 중앙과 도에서 적합한 훈련사업과 정보만 잘 제공하여도 그런대로 경영되어 질 것이지만 사회분야의 지도에서는 일선에서 매우 구하기 어려운 자원의 동원과 시간의 제공 등에 더 큰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Ⅵ. 건의사항

1. 지도직 신분이 지방직으로 변화될 경우 정부는 일선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공무원의 직위규정을 명문화 시키고 호봉체계를 연구직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도 단위 지방 생활지도관 직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 지방 지도공무원의 임용권은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도 원장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되어 전문성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농촌진흥청내에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 지도공무원의 연수문제를 전담하는 수련소 또는 과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화에 따른 중앙-도-시·군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백히 정의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직제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1. 김재호 외, 1988. 전환기 농촌지도사업 추진체계의 검토, 농업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2. 신동완, 1994. 21세기농촌지도사업의 선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1호.
3. _____, 1994. 지방화시대 농촌지도사업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2호.
4. 최민호, 1994. 농촌지도체계의 발전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2호.

지방화시대의 시·군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발전방향

서 정 래

남원시 농촌지도소장

농업과 농촌, 농민의 특수성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단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민을 위해서 지역 농업의 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던져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내가 30여년간 지도소에 몸 담고 있으면서 농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무어 좋은 게 없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종자, 종묘, 묘목, 종축 등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일 것이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더욱 그것이 강해지고 또, 무엇인가 지도소가 앞서가는 기술이나 정보 또는 조직 배양한 감자나 미꾸리라도 키워서 보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역 농정의 구체적인 실현자로서 또, 해결자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많은 좋은 농정시책이 나왔었지만 그 빛을 못보고 또,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못된 것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장기적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농정사상 가장 많은 농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과거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이제 자율 방식을 첨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방에서 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다.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행위이다. 서두에 먼저 언급했지만 농업·농민의 특성상 이러한 농정사업들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공을 기대하기란 너무 편의적인 생각일 것이다. 부단히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의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농민과 밀착해서 교육과 토의 또 지원과 보조역할까지도 농촌지도사업이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역할이 중요하다.

일부 전업적으로 영농을 하는 농가에서는 지도소 못지 않게 새로운 기술 및 각종 정보 등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정보도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농민의 층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농촌지도소는 먼저 체계적으로 각종 기술과 정보의 입수능력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첨단 장비(시청각기재, 교육장)와 기동력을 갖추어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보여주고 실증하기 위한 시설과 자재 등은 신속하게 갖추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실증 포장도 새로 나오는 새 생산시설이나 기술을 농민보다 먼저 수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융통성과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서 시행할 때 농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농촌지도소는 지역 농업의 각 품목별로 전문가의 집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최근 우리 농민 농업은 무엇인가 1~2가지의 전업적인 품목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확실한 또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을 찾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 믿음직한 역할을 우리 지도공무원이 해주어야 한다. 또, 지금의 농촌농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제도적으로 지도소가 전문가라는 특성을 살려서 현재 과, 계의 행정적인 체제를 바꾸어서 분야별 “팀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 농촌지도소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종 수당이나 봉급의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방화 시대 농촌지도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 계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데 보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과의 분리성 내지는 지도소가 전문가집단이란 인식을 갖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시·군 단위 농촌지도 공무원의 완전

지방화 보다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조화된 농촌지도 사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지역 농업 개발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지역 농업 개발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시에 준비없이 완전 지방직화하면 지역 농업 개발을 책임지고 홀로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방직화 한 다해서 국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속성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 사업과 지방사업이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때 시·군 단위에서도 국가직이 있어서 국가 사업을 같이 병행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